

정리하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혁명

총선특보 6호

발행일 : 2012년 3월 30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3가 70번지 3층
블로그 : blog.jinbo.net/wrp
E-mail : wrp@jinbo.net

야권연대 반대하면 대안은?

야권연대 반대하면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 아니다. 의회주의 정치세력은 결코 야권연대에 반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총선 전부터 진보신당이 취한 이른바 '원칙 있는 야권연대' 방침에서 보듯 필연적으로 야권연대로 빠져든다. 진보신당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게 야권연대에 끼워줄 것을 요구했다가 소외당하자 통진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의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통진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의회 진출에 모든 것을 중속시키는 의회주의는 의석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 같은 것은 언제든지 희생시킨다. 그래서 '무원칙한' 기회주의이다.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것은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것에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중투쟁과 사회변혁을 의회 진출과 정부 입성에 중속시키는 의회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연대 반대가 의회주의 정당인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진보신당 지지도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의회주의 정치세력들 중에서 찾고자 한다면 대안은 없다. 그러나 다른 진정한 대안이 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대중 직접행동으로 그러한 노동자의 세상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동자 행동강령>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바로 야권연대에 대한 노동자의 대안이다. 이것이 야권연대 반대가 또 다른 의회주의로 귀착되지 않게 해 줄 투쟁 대안이다.



야권연대 하면서 '탈비정규직'?

진보신당 후보들은 통진당이 회피하는 '비정규직 철폐(탈비정규직)'를 공약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진당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총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이 모두 선거용 헛공약(空約)인 것처럼 어차피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철폐'도 마찬가지로 아닌 가?

헛공약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노동자 행동강령과 연동되고 그 행동강령의 한 부분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강령이 대중투쟁에 의해 통으로 쟁취될 때에만 '비정규직 철폐'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자 통제 하에 재벌 몰수 국유화' 없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가능한가? 재벌들이 은행(금융사들)을 통해 쌓아놓고 있는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노동자 통제 하에 은행 몰수 국유화' 없이 정규직화를 위한 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가? 자본가 정당 및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노동자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를 통해 이러한 몰수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가 가능한가? 아니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한 투쟁이 없는 '비정규직 철폐' 공약은 헛공약이고 기만이다.

진보신당의 '비정규직 철폐' 공약은 이러한 행동강령의 한 부분으로 제출되고 있지 않다. '재벌 몰수 국유화' 강령을 거부하고, 노사협조적인 독일식 공동경영제를 통한 재벌개혁을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프랑스식 기업 이익분배제를 제정하여 정규직 전환기금을 마련하자고 한다. 결국은, 말이 좋아 '비정규직 철폐'지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 등 차별 축소 법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의회주의 헛공약인 것이다. 의석 확보를 위해 자본가 정당과 야권연대에 매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하고 있는 진보신당

달려야 하므로 급진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강령을 위한 투쟁은 '안 된다!' '의회를 통한 법 개정이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의 일부이지 그 대안이 아니다.

정치 내용을 중심으로 대안을 세워야

대안은 비정규직 철폐를 실제 가능케 하는, 그리고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하도록 이끄는 위와 같은 <노동자 행동강령>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강령을 충기지로 하여 야권연대에 대항하는 정세적 대안 구상을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전선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별 투쟁들이 반MB 야권연대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자본주의 체제를 갈아엎는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파괴한 야권연대에 대한 일관된 반대는 우리에게 이러한 과제를 제기한다. 진보신당을 지지하고서는 결코 야권연대에 대한 일관되고 철저한 반대로 나아갈 수 없다. '좌파'를 자임하는 많은 정치조직, 현장조직들이 통진당 배타적 지지는 반대하지만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왜 인가? 다름 아니라 야권연대의 일부인 진보신당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히 단절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변혁운동진영"이라는 이름으로 무원칙한 종파적 '범좌파' 블록으로 진보신당과 한 데 묶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범좌파 블록은 야권연대에 맞서는 대안 구상이 되기는커녕 진보신당을 매개로 결국은 야권연대 구도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노동자 행동강령> 같은, 반MB 선거심판론과 의회주의 헛공약에 맞서는 대안적인 충기치를 중심으로 당면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밀고나가야 한다. 경로와 방법 이전에 정치 내용을 중심으로 정세적 투쟁과제들을 떠안을 전국 정치투쟁전선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도 이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 **혁명**

-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폐지!
-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실업 해소! 야간노동 철폐!
-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약법 철폐!
- △ 한미FTA 반대!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재)국유화!
-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 은행 국유화!
- △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 △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단결로 대학등록금을 폐지시키자!



제도 자체다.

대학등록금 반값을 넘어 폐지로!

이러한 상황속에서 반값 등록금 또는 등록금 폐지 요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이거나 부자들 이외에 없다. 자본주의 교육제도 자체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이상

자본가계급이 교육의 비용을 전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직업학교로 전락한 대학에 다니는 비용을 학생들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마치 직업훈련 비용을 국가나 기업에서 담당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등록금 폐지 문제는 단순히 고액의 등록금을 낮춰 달라는 것 이상의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의 성격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다.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폐지는 누가 그것의 비용을 담당할 것인가를 곧바로 질문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하러다가 국가부도 난다고 난리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있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정권 때 국회의원 과반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국립학교 등록금 인상을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등록금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등록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투쟁하는 대학생들의 답은 단호해야 한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책임지라고 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600조가 넘는 부를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자본가들이 책임지라고 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를 자본가 정치인들이 해결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투쟁으로만 해결해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등록금 폐지 투쟁과 노동자 투쟁은 결국 하나다!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두 진영의 투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자본가 계급 자녀들은 높은 등록금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오히려 기부금 등의 형태로 입학함으로써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평등한 자본

주의적 경쟁이다. 이에 비해 노동자계급 자녀들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저임금 아르바이트 경쟁은 또다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을 동반하고 있다.

지난해에 칠레에서는 등록금 폐지를 내걸고 칠레 대학생들의 뜨거운 투쟁과 노동자들의 동조가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자본가정부의 빛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스라엘에서도 물가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어디 이뿐인가? 아랍에서는 민생파탄에 더해 지배계급의 정치적 억압에 맞선 무장봉기가 전개되었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아랍파이 운동이 진행되었던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이 지금 한창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투쟁도 자본주의 경제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투쟁의 일부분이다.

국내적으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등록금이 인하되어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노동자들이 해고된다면 등록금 인하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대학생들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나서고, 대학 시간강사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등록금 투쟁의 연장선인 것이다.

등록금 폐지 투쟁은 자본주의적 경쟁교육에 맞서 가장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등록금 폐지 투쟁은 자본가계급에 의해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학생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는 것처럼, 노동자들도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투쟁해 나갈 때 등록금 폐지는 가능하다. 등록금 폐지를 목적으로 학생들의 단결과 노동자들의 단결을 확대해 나가자!

혁명

정치권에서 대학생 등록금문제를 가지고 연일 논란이다. 새누리당의 등록금 인하대책이 별로없다는 것을 간파하자마자 반값등록금 공약이 있는 민주당이 쟁점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미 이명박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당선되자마자 없었던 일로 해버렸던 적이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게 반값등록금은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등록금이 거의 두 배로 올랐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총선 선거공약으로 무상교육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이러한 삶의 문제가 전사회적 관심사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적대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폭발하고 말 것이라는 자본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두려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경쟁을 양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대학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해결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지난해 학자금대출 인원은 전체 대학생 300만명 중에서 136만명이나 되고, 3만명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후에는 실업이 기다리고 있고, 어렵게 취업한다고 해도 수 천 만원의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이처럼 우울한 상태가 연간 230명의 대학생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끔찍한 자본주의적 경쟁과 이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학교가 돈벌이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취업난을 이유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의 교육

창간준비 7호
(2012. 03. 24)
정세월간지

혁명

구독신청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값 : 5,000원]